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과 취업 제고 방안*

최정진**

목 차	
I. 머리말	IV.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의 문제점
II. 현황 및 이론적 논의	및 방안
III. 실문분석: 대전 사례	V. 맺음말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잘 정착하고 있는지, 이들이 탈북해서 남한정착에 오히려 부담이 되어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어떠한지 취업관계는 어떠한지, 단지 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지내는지 등등을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인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과 취업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모색하는 데서 그 연구목적은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및 취업과 관련한 현황 및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중부권에 위치한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문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과 취업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서 나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취업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취업, 대전시, 구직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038).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조교수.

I. 머리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록 그들이 국가를 떠나 살고는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용어는 ‘탈북자’이지만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는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공식적인 법률 행정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모든 것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정착지를 찾아 그들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을 것이다. 더욱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이라는 과제 또한 목숨을 건 탈출만큼 때론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나하나 낯설어하면서도 무조건 부딪혀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소식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따듯한 시선을 거두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잘 정착하고 있는지, 이들이 탈북해서 남한정착에 오히려 부담이 되어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어떠한지 취업관계는 어떠한지, 단지 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지내는지 등을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인 것을 인식하여 점차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연구의 포인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등 제3국에 산재해 있는 탈

북자수는 대략 3만에서 30만 등으로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 국한하며 이들을 어떻게 한국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정부가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의 여건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심¹⁾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을 제정하고 재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이들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대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갖는다. 이들이 남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은 취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일단 먹고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본주의 시장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취업을 할 여건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관련 자격증의 미비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거부감이나 무시는 아직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²⁾이어서 이들의 취업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²⁾이다.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역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계와 의구심을 어떻게 회식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1)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활성화시켜 전문상담사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을 운용하다가 급년 초부터 정부의 강한 통일의를 담고 남북하나재단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해 보고자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어울려 따뜻한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 통일부의 『통일백서』(2014, 164-195)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2) 필자는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위촉, 대전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사회에 분포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전 연령에 걸쳐 이웃 또는 직장에서 교제하기가 다소 힘들다고 하는 정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관련 연구논문으로는 안태윤·황해동(2012)의 논의에서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학교, 언론, 표현의 자유 등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폭언, 욕설 등을 경험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역 정착 및 취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통일의 시금석으로서도 과제인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취업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 수 있는 관점을 모색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및 취업과 관련한 현황 및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중부권에 위치한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과 취업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서 나아가 지속적인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취업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현황 및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³⁾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2014년 6월까지의 잠정 입국인원은 26,850여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10세는 1,152명이며 10-19세는 3,229명, 20-29세는 7,339명, 30-39세 7,890명, 40-49세 4,249명, 50-59세 1,353명, 60세 이상은 1,156명이다. 즉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 10대 순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취업 및 고용안정과 더불어 직업 능력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6월 말, 통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거주 현황으로는 경기도 7,041명으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 6,569명, 인천 2,280명, 충남 및 세종권 1,034명이

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연령별”,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2014년 7월 29일 검색)

며 경북 988명, 부산 930명, 충북 910명, 경남 901명, 대구 702명, 강원 609명, 광주 570명, 전남 551명, 대전 492명, 전북 486명, 울산 430명 제주 1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상황으로 보면 고용일자리에 따라 거주지가 크게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7년부터 2008년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9년 자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0년부터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작성을 한 것이다. 인용하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4.1%이며 고용율은 50%, 실업률은 7.5%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47.9%(2007), 49.6%(2008), 48.6%(2009), 42.6%(2010), 56.5%(2011)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률 면에서도 22.9%(2007), 9.5%(2008), 13.7%(2009), 9.2%(2010), 12.1%(2011), 7.5%(2012)인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정부의 취업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7.5%에 해당되는 구성원에 대한 취업 장려방안 및 직업알선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취업은 삶의 연장도구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에서의 지역 정착과 취업은 필수인 셈이다.

2. 이론적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세분화된 접근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로 윤여상(2002)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투쟁으로 정의되는 심리학적 개념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대, 요구 등에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가는 것인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선화(201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착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나센터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하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심리치료가 병행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화 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로는 대부분 국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정착화 방안 연구(이지경 2010, 2011; 유병선 2010; 윤인진 2000, 2007, 2009; 서윤환 2004 등)가 대부분이며 김택진(2010)은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도 구축해 보자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현황만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적 사례 연구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접근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⁴⁾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직활동 및 사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들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주로 그들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의 초점도 긍정적 측면의 적응보다는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 정착제도, 일자리, 교육, 청소년, 의료건강, 여성지원, 가족복지 방면으로 다량의 실태조사를 한 연구보고서⁵⁾를 가지고 있다.

4) 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강창구(2011)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이지경(2011)의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향”, 유병선(2011)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신두철(2011)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박영자(2012)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성격과 과제”, 이지경(201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김도태(2012)의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두철(2012)의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 유병선(2012)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모색” 등이 있다.

5) 최근의 연구보고서로는 “2013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013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2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패널조사”, “2012 북한이탈주민 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 규모에 대한 연구는 조사되었으나 지역별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취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설문분석: 대전 사례

대전은 옛날부터 ‘한밭’에서 유래된 도시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분지지형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형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 등이 지나가는 전국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한편 대전은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서 여러 지역 출신의 다양한 인구가 구성되어 있고 연구, 과학, 행정, 교육,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관련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말 대전의 행정구역은 539.96km²이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 78개동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면적은 유성구가 177.22km²로 가장 넓다. 대전 인구는 154만 8천 명이며 인구는 관공서, 상업시설이 밀집되고 주거 및 교육환경 등으로 인구가 크게 유입된 서구가 496,513명(외국인 제외)으로 가장 많다.⁶⁾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보고서⁷⁾에 따르면 대전의 2012년 지역 내 경제 활동인구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취

태조사”, “2012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있다.

6) “대전광역시청 행정구역 소개”, <http://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16>. (2014년 9월 19일 검색)

7) “대전의 분야별 통계”, <http://www.daejeon.go.kr/sta/StatisticsFldView.do?ntatcSeq=13393&menuSeq=180&colmn1Cont=C0203&colmn2Cont=C020301&pageIdx=1#>. (2014년 9월 19일 검색)

업자수가 75만 4천 명이며 실업자수는 2만 8천 명, 실업률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문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분야에 28,191개 업체와 81,85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 업종으로 18,727개 업체와 53,799명이 종사하며 제조업은 6,914개 업체와 55,45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운수업, 수리 및 기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치구별 사업체 수를 분류해보면 사업체수는 서구는 32,104개(30.7%)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중구는 19,387개(18.5%), 동구와 유성구는 18,213개(17.4%), 대덕구는 16,700개(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수 역시 서구가 159,021명(30.5%)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유성구는 123,942명(23.8%), 대덕구 86,956명(16.7%), 중구 85,498명(16.4%), 동구 65,864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즉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 사업체수는 360만 2천여 개이며 서울, 인천 및 경기도는 170만9천여 개로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은 10만 4천여 개로 전국 대비 2.9%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전국 종사자수로는 1,856만 명이며 대전은 52만 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구조 면에서 대전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가져오는 직업인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지역으로서 대전은 약 2만 7천 명의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에 비교해 본다면 490여 명이 거주하고 있기에 규모에서도 미미한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선정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부내륙지역이며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며 다양한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향후 대전시가 통일대비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취업 면에서 시범지역으로 갖춰지게 된다면 남한 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통일광역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연구추

면에서 선정하였다. 나아가 사통발달이라는 점에서 인구유입을 불러올 뿐더러 전국규모 면에서 통일시대 남북주민의 화합형 모델로 확대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사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선정하였다. 조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범위 내에 있기에 실질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47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전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남한 내 거주하고 있는 2만 7천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통일시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통일리더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자의 거주지역이기도 하며 통일부에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지역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류와 이해가 있어왔고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와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취업관련 속내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주변적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해보며 본 장에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하여 거주지 정착과 취업에 관련하여 2013년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30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 총 유효응답자 114명의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지역 정착에 관련한 만족도와 취업부분에 대한 빈도분석과 관련 요인 중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카이검정을 실시하였다.

8) 대전시청 내부자료(2012년 1월)에 의하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443명이며 남자는 116명, 여자는 327명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동구에 134명(남자 30명, 여자 104명), 중구 48명(남자 17명, 여자 31명), 서구에는 126명(남자 29명, 여자 97명), 유성구에는 62명(남자 21명, 여자 41명), 대덕구에는 73명(남자 19명, 여자 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6월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수는 4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문에 임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에 대한 분석으로 남자는 34명(29.8%)이며 여자는 80명(70.2%)이다. 즉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		체	빈도(명)	백분율(%)
			114	100.0
성별	남자		34	29.8
	여자		80	70.2
연령별	20대		18	15.8
	30대		30	26.3
	40대		31	27.2
	50대		19	16.6
	60세 이상		14	12.3
	기타(무응답)		2	1.8
거주지별	동구		43	37.7
	중구		5	4.4
	서구		52	45.6
	대덕구		5	4.4
	유성구		9	7.9
학력별	초졸		1	0.9
	중졸		32	28.1
	고졸		48	42.1
	대제 및 대졸		22	19.2
	대학원 재학 및 대학원 졸		2	1.8
	기타(무응답)		9	7.9
주택별	영구임대아파트		87	76.3
	국민임대아파트		13	11.4
	영구 및 국민아파트 이외의 주택		5	4.4
	단독주택		7	6.1
	기타(무응답)		2	1.8
가구소득별	50만원 이하		44	38.6
	51-100만원		25	21.9
	101-150만원		18	15.8
	150-200만원		10	8.9
	201만원 이상		5	4.4
	기타(무응답)		12	10.4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약 3:7 정도로 여성이 많다. 이처럼 여성 탈북자가 많은 이유로는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는 데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피, 은신, 잠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남성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및 직장에서의 근태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기 때문에 탈북이 여성보다 적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연령별로는 설문응답자 가운데 20대는 18명(15.8%), 30대는 30명(26.3%), 40대는 31명(27.2%), 50대는 19명(16.6%), 60세 이상은 14명(12.3%)이며, 기타 무응답을 한 응답자는 2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별 분포⁹⁾와 유사한 통계결과를 보임으로써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30, 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자체에서도 향후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력증 취득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중소기업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시켜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현장에서 느끼는 차별, 무시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거주지별 설문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지역으로 52명(45.6%)이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지역으로 43명(37.7%)이 조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유성구, 중구와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구와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과 맞물려 서구와 동구지역에는 영구입대아파트가 대규모로 위치해 있으며 관공서, 산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의 편리성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동구와 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9) 2012년 1월 대전시정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총 442명이다. 그 가운데 20대 미만은 27명(5.7%), 20대는 71명(14.9%), 30대는 140명(29.4%), 40대는 142명(29.8%), 50대는 45명(9.5%), 60대 이상은 51명(10.7%)이다.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학력별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고졸에 해당하는 학력이 4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에 해당하는 사람이 32명(28.1%)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서의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의무교육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으로 응답한 결과가 아닌 듯 싶다. 따라서 중졸과 고졸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더하면 80명(70.2%)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다섯째, 거주하고 있는 주택별 분석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제공한 영구 또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나 정부가 제공한 영구 및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여유에 따른 더 큰 집으로서의 주택마련인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나쁜 주거환경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별 분석으로는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사람이 44명(38.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하에 25명(21.9%),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월소득을 얻고 있다는 응답자는 18명(15.8%),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응답자는 10명(8.9%), 2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5명(4.4%)이며, 기타 무응답을 한 경우도 12명(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전체 10명 가운데 6명 정도로 과반수를 넘는 많은 수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시 면접자에게 말하기를 약간 명은 약간의 알바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소득에 대한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규모가 남한 가정의 가계소득에 비해 매우 열약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고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저임금의 원

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연계하여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2>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전에 정착하여 거주한 기간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13명이었으며 분석된 자료에서처럼 최소 1년에서 12년까지 나타났고, 대개는 평균 5년 이상을 대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대전이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개인별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직업 또는 학교 등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8명(41.7%)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금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28.6%)이며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85.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전 거주기간

응답자수	거주기간 최소값	거주기간 최대값	거주기간 평균값
113명	1년	12년	5년 2개월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에 대한 현재 만족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4	4.4
조금 불만족스럽다	9	9.9
보통이다	38	41.7
조금 만족한다	26	28.6
매우 만족한다	14	15.4
합계	91	100.0

이 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매우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남한사회에 전반적인 만족도인지 아닌지 다른 여타도시보다 대전생활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밥 굶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한 만족도인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점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표 4>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분석한 것이다. 남한에 대한 구성원의 소속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55명(48.3%)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은 남한사회 혹은 대전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남한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2.6
별로 그렇지 않다	11	9.6
보통이다	45	39.5
대체로 그렇다	44	38.6
매우 그렇다	11	9.7
합계	114	100.0

체제가 다른 남한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도 다양하기에 이에 대한 세부분석은 연령별, 직업별, 심리적 접근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5>는 대전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의 분석결과이다. 응답자들은 대전에 대한 소속감이 '보통이다' 부분에서 반응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 114명의 평균 거주기간 5년을 생각해 볼 때, 대전지역

사회에 대한 정착과 소속감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점은 특히나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정이나 기타 시민화합측면에서도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대전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7.9
별로 그렇지 않다	12	10.5
보통이다	49	43.0
대체로 그렇다	33	28.9
매우 그렇다	11	9.7
합계	114	100.0

<표 6> 성별에 따른 직업여부 빈도분석

성별	직업여부	빈도(명)	백분율(%)
남자	있음	8	27.6
	없음	21	72.4
	합계	29	100.0
여자	있음	27	37.0
	없음	46	63.0
	합계	73	100.0

<표 6>은 성별에 따른 직업여부를 분석한 것으로서 남자응답자 29명 중에서 8명(27.6%)는 직업이 있고 21명(72.4%)은 직업이 없으며 여자의 경우 73명 중 27명(37.0%)는 직업이 있고, 46명(63%)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국 수준에 비취 약 2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8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청공무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2012년 말 대전시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466명 가운데 취업연령자로서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 37% 정도이며 그나마 대전보다 고용조건이 나은 수도권 및 경기도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였다. 도표에서 보여 주듯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무응답을 제외하고 35명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직업훈련이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6	6.5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9	9.7
그저 그렇다	23	24.7
조금 도움이 되었다	35	37.6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	21.5
합계	93	100.0

<표 8> 직업정보 수집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텔레비전	28	23.9
신문 및 라디오	12	10.3
정부기관	6	5.1
인터넷	22	18.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3	11.1
대전취업지원센터	8	6.8
채용박람회	1	0.9
이웃이나 지인	23	19.7
사회단체	4	3.4
합계	117	100.0

<표 7>의 조사결과 직업훈련 교육이 지역 정착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총 114명에서 무응답을 한 21명을 제외한 9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금 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명(59.1%)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 정착을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의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8>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업을 구할 때 연계 되는 정보처들을 질문한 결과로 복수 응답을 한 수이다. 설문분석결과로서 직업정보를 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28명(23.9%)이 텔레비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직업으로 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명사의 특강이나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 다음 순위로는 23명(19.7%)이 선택한 이웃이나 지인들, 3순위는 22명(18.8%)이 선택한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직에 대한 정보는 방송매체 및 지인들을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직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력	10	8.4
전문적 기술	30	25.2
자격증	42	35.3
인성	5	4.2
월급	26	21.8
인맥	2	1.7
기타	4	3.4
합계	119	100.0

<표 9>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직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42명(35.3%)이 선택한 자격증이고, 그 다음 순위로는 30명(25.2%)이 선택한 전문적 기술, 3순위는

26명(21.8%)가 선택한 월급으로 나타났다. 월급은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복지, 장래성 등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고려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직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격증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일자리창출지원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직종의 안내와 제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다.

<표 10>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항목별 요소

성별	구직의 어려움	응답	
		빈도(명)	백분율(%)
남자	경력	6	17.1
	자격증	7	20.0
	학력	5	14.3
	영어	4	11.4
	자기소개서	1	2.9
	연령	11	31.4
	기타	1	2.9
	합계	35	100.0
여자	경력	8	9.3
	자격증	29	33.7
	학력	11	12.8
	영어	6	7.0
	자기소개서	6	7.0
	연령	24	27.9
	기타	2	2.3
		합계	86

<표 10>은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항목별 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35명 남자의 경우는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연령, 자격증, 경력, 학력, 영어(외국어)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설문에 응답한 86명의 경우 자격증, 연령, 학력, 경력, 영어 및 자기소개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분석결과 상위에 위치한 것처럼 구직활동 하는 데 고용연령과 학력, 자격증은 남한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현재 직업만족도와 지역정착도움, 만족도평균, 대전 만족도평균의 상관관계

		만족도 평균	대전에서의 만족도 평균
현재 직업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708**	.165
지역정착 도움	Pearson 상관계수	.357**	.324**

* $p < .05$, ** $p < .01$, *** $p < .001$ *

<표 11>은 현재의 직업만족도와 지역정착도움의 값으로 현재의 만족도, 대전에서의 만족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와 현재의 직업만족도($r=.708, p<.01$), 만족도와 지역정착의 도움($r=.357, p<.01$), 대전 만족도 점수와 지역정착도움($r=.324, p<.0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중에서 현재의 직업만족도 점수와 만족도 평균이 강력하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 및 직종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뿐만 아니라 약 2만 7천여 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성공정착에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의 문제점 및 방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까지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의 협조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

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탐복하여 남한에 입국하여 지역 정착과 취업에서 무뎠히게 되는 문제점을 분석해보며 나아가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지역사회 정착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에서 중요한 사업기관으로는 하나센터를 들 수 있다.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고 있지만, 오늘날 지역적응센터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지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대전하나센터¹⁰⁾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역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신규 전입자들의 초기지역적응교육과 사후의 예산이 70% 정도 편성되고 나머지 25%는 기존 정착자들의 적응지원 사업예산과 5%의 운영비가 그것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나센터 내의 내부강사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법적인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낭비를 없애야 하겠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개설이 2010년부터 선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전문상담사의 수나 전문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전문상담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명 안팎의 숫자이지만 주로 전화상담이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은 매우 의문이 많다. 대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470여 명인데 반해 전문상담사는 3명이며 동구 2명, 중구 1명으로 분산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NGO를 운운하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계성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

10) 대전지역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사업비와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과약을 한 결과, 사업비 및 인력 면에서 적지 않은 고충을 듣기도 하였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지역주민을 빼고 어떤 사업도 성공적이지 못하므로, 결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민의 힘을 빌리고 소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착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일탈행위 및 특별대우 기대 심리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을 계기로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고 향후 이들의 대량 탈북이 통일과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들이 지역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착과정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병폐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탈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대응하고 연구해야 할 숙제가 남는다.

다섯째, 교통중심지로 주소지만 대전에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 7천여 명이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고 이들은 이방인처럼 떠돌이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어느 곳에 가든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보니 주소지만 대전이고 직장이나 다른 활동의 근거지는 서울이나 그들만의 아파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이들이 떠돌거나 이방인처럼 지내는 것은 지역정착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도 이들을 묶을 수 있는 안정된 취업이나 활동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취업 문제점과 제고방안

정부(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있어 취업¹¹⁾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취업에 문턱은 생각보다 높으며 그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첫째, 고용불안정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면

11) “정착지원사업”,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Job21.do#>. (2014년 8월 10일 검색) 자료는 남북하나연합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가운데 취업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직장이 생소하여 안정되거나 만족된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안정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환경의 여건 개선 및, 한국 내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듯 여겨진다.

둘째, 취업을 앞선¹²⁾해도 전문성 있고 복잡한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대한 문제점은 북한에서 습득된 행동,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직장동료 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작업의 강도가 세다는 이유 등으로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과 취업에 있어서의 예로점은 그들이 정신적인 노동보다는 육체적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다보니 앞날에 대한 목표와 비전뿐만 아니라 자립 및 자활의지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흔한 예로 대전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북한이탈주민 강사가 필요할 시 통일교육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 사람은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통일교육 강사를 불러야 하는 고충도 따른다.

넷째, 대전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 및 저임금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은 대기업이 없고, 자생적이고 향토적인 중소기업도 많지 않은 도시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취업했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곳도 거의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별 적성에 맞는 취업을 연계하는 길이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들을 위한 취업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비교적 젊고 근로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초기정착지원 과정에서 곧 바로 취업으로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몰

12) 대전지역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명이라도 성공적인 정착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부분 관련 업체들은 대전을 기점으로 인근 충남지역에 분포한 중소기업체이며 생산직, 서비스직종에 한하고 있었다. 캐이디씨네트워드를 비롯한 약 20여 개 업체들이다.

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아주 세심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한의 환경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은 오히려 지역 정착에 환멸 또는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과의 친화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제도이다. 한국 사회 노동현실 중 자영업 비율이 높은 점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지원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저금리 대출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소액지원 제도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 제고이다. 북한이탈주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나, 운영주기가 길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직업훈련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¹³⁾을 개발해야 하겠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고용주 대상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거나 이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이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고용현장에서 남한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무시 등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신미너(2010)는 밝히고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높은 사회참여 의식과 활동성을 취업으로 연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당면한 금전문제, 개인 및 가족의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 여성 북한

13) 대전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접했던 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전문예술가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돌봄기제도, 북한에서의 자수 또는 한복을 만들던 기술 등으로 수익을 제작하는 방법도 넓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들을 '아동돌봄미' 형태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 성별,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 역할

대전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2012년 6월까지 자치행정과 업무였으나 7월부터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부서이동을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기존의 관례적 측면에서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업무에 힘쓰고 있다. 시청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시행했을 때 행사참여자가 한정적”이며 “시청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의견을 통합하고 창구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통한 성과 위주보다는 개인이익을 도모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사업타당성에 비추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 즉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시민단체에게 나눠주기 형태로 집행하다 보니 일회성 행사로 그쳐버리는 전시성 행정, 소모적인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적인 성격으로 진행시켜 보고자 하는 계획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자치단체로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단체 간에 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체 간 화해와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통합을 위한 출구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올해 대전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 위주로 참여하는 단체도 많고 혜택도 골고루 주며 지역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들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전만이라도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주민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세부적 연구를 진행시켜야 하겠다.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까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집행, 사업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공식적인 지역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주지 보호담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다중 업무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즉,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전국적 배치의 흐름, 그리고 지방자치제 발전 수준에 맞게, 지방자치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 주도의 직업 알선 및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범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립·자활하는 것에 최대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지원 중 취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443명이며 그 가운데 남성이 34명이며 여성은 80명으로 여성이 보다 많으며 30, 40대 연령층이 주요 구성원이며 대전에

14) 대전시의 경우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여성가족청소년과 부서에 다문화가족담당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3년마다 인사이동에 따른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관공서와 사업체수, 아파트 밀집지역 및 교육기관이 많은 서구지역에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구지역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직업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한에서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대전에서의 애착심과 소속감에도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훈련이 직업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직업정보는 주로 텔레비전과 이웃이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직업을 구하는 요소로는 자격증,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직활동에 어려움으로 남자는 연령과 자격증, 경력을 우선순위로 들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자격증과 연령, 학력, 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만족도와 지역정착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와 만족도와 대전에서의 만족도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직업 및 직종을 고려한 일대일 취업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연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정착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재정지원의 한계, 전문상담사의 역할,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특별대우 및 기대심리, 이방인으로서 존재 등이 다.

이들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취업에 따른 고용안정을 유지하며 취업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정착의 성공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지역정착과정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소외되지 않고 지역민과 어울리며 정착하려는 의지와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 취업, 생활적응 강좌 등이 서울지역에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2만 7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 장치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 대

전지역에 제2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행해 보는 것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족, 직장, 이웃사이에 문화를 익힐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한사회 생활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다음에 올 통일을 위한 귀중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끝으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나와 다른 고향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대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본래 한민족이라는 사고를 지니고 있기에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에 향했던 선입관과 편견의 시선을 버려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자강도' 또는 '양강도'라고 답을 하면 우리는 이를 그곳에서 대전으로 거주 이전에 따른 이사를 온 것으로 여기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적 통합에 대한 성숙도 필요하다. 북한에서 지냈던 문화의 특수성, 또는 북한의 지방에서 고유의 문화와 개인의 북한에서의 고유 경험에 따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을 대전시에서 문화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시범적 발굴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참고문헌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너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韓國社會學』. Vol. 45. No. 1, pp. 191-227.

강창구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pp 1-18.

김덕진 (2010). “북한이탈주민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전의 역할.”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pp. 36-49.

김선화 (2010). “현장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발표. 5월.

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전시 자치행정과 (201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추진현황’ 내부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2011). 『힘내라! 정착성공』.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매뉴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업무 매뉴얼』. (재)경기가족여성연구원.

_____ (2012).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_____ (2012).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패널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_____ (2013).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_____ (2013). 『2013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10).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활동 매뉴얼』. (재)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서창록 (2010).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너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pp. 145-174.

신두철 (201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51-67.

신미녀 (2010).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상호인식 조사.” 2010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6-8.

안태윤 황해동(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재)경기가족여성연구원.

유병선 (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와 지원사업의 과제.” 충남대학교 한국 정치연구소·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53-72.

____ (201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민주 시민교육학회·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41-50.

윤여상 (2002).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남한생활』, 대구: 세명.

윤인진 (2007). “탈북자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기로에 선탈북자 정착지원 정책, 주무부처 조정, 지자체 민간이양 가능한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경인발전연구원.

____ (2009). “북한이탈주민 정책 변화와 방향 모색.”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10년, 현주소』, (사)새조위 홍사덕 의원 주관(제2차 북한이탈주민 자력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지경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pp. 9-31.

____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pp. 21-40.

____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47-68.

정주신 (2011). “새터민 정착지원과 통일준비.” 『한반도 통일준비의 모색』, 대전: 프리마북스, pp. 17-47.

____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1: 탈북자 북한 한국』, 대전: 프리마북스.

____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2: 탈북자 난민 UNHCR』, 대전: 프리마북스.

최성일 이윤희 (20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승호 (2012). “충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미래’ 제3차 권역별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정진 (2013). “대전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과 민주시민교육 논문집,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p. 21-43.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업무 매뉴얼』.

____ (20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 편람』.

____ (2010).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업무 매뉴얼』.

____ (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____ (2014). 『통일백서』.

하영수 (2009).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 회보』, 대한정치학회, 제17집, 1호, pp. 125-141.

행정안전부 (2012).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직생활 길잡이.”

홍순경 (200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10년, 현주소』, (사)새조위 홍사덕 의원 주관(제2차 북한이탈주민 자력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남북하나재단. <http://www.dongposarang.com>.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nkdb.org/2012/main.php>.

http://dj.breaknews.com/sub_read.html?section=section36&uid=9867. (2013년 4월 2일 검색)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51674. (2013년 4월 2일 검색)

<http://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16>. (2014년 9월 19일 검색)

<http://www.daejeon.go.kr/sta/StaStatisticsFldView.do?ntatcSeq=13393&menuSeq=180&colmn1Cont=C0203&colmn2Cont=C020301&pageIndex=1#>. (2014년 9월 19일 검색)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55079. (2013년 4월 5일 검색)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105006006000. (2014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Job21.do#>. (2014년 8월 1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08월 31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9월 06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Enhancing local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an unity

Jeong-Jin Choi

(Dept. of Politics, Communication & International Studies,
Hannam Univ.)

The study has the purpose to find a perspective that can live Koreans defectors area around the settlement and employment measures.

To do this, first look at the related settlement area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employment status and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Daejeon city is locate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ir settlement in employment and in the community employment issues were discussed and the countermeasures for the sustainable and stable fixing to go take a look at that.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local settlement, employment, Daejeon city, jobs